

정부, 5·18 단체 상대 구상권 행사 않는다



정부가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공사 지연'을 이유로 광주 5·18단체에게 제기하려 했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 초 이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문화부, 법률검토 후 총리실과 논의 중 ... 다음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내년 1월 6일 시효 임박 ... 문대통령 옛 전남도청 복원 공약 영향 미친 듯

정부가 5·18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5·18 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문화부는 서울고검의 의견 검토를 거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총리실 등과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총리실과 논의를 마치고 23일 귀국하는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들 모임인 5·18 단체를 상대로 국가가 손배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여러 논란이 있었고 최종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문화부가 충분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문화부의 보고를 받고 있는 상

황"이라며 "총리가 귀국하면 최종 보고를 받고 이르면 24일이나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문제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민생담방을 위해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5·18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 "사리에 맞고, 광주시민들의 걱정도 덜어 드리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이 가닥을 잡은 데에는 5·18 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효가 내년 1월 6일로 임박한다는 제주 강정마을과는 달리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5·18 정신 계승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5·18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 옛 전남도청 복원이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가가 이미

110억 원을 배상했다는 점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 제기엔 나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을 무시한 5월 단체들의 점거 농성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기훈 지역문화재단이사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문화전당 활성화를 비롯한 문화도시조성사업이 본래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구상권 철회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박재만 참여자치21사무처장은 "도청 복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사려 깊은 결정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단체들은 문화전당 공사 기간이었던 지난 2008년 6월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 준치를 주장하며 2년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건설사 측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정부에 1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문화전당 측은 이 금액을 건설사 측에 배상한 뒤, 5·18 단체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 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교체

중앙공원 1지구 (주)한양·2지구 (주)호반으로

6개 지구 중 2곳 바뀌어

광주시는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6개 지구 가운데 2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교체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애초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일부 업체와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등 파문이 일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19일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평가 과정에 점수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상철 공원녹지과장 과 양병욱 공원조성2담당을 각각 대기발령 시키고, 정대경 지방기술서기관을 공원녹지과장에, 이신 지방시설사무관을 공원조성2담당으로 전보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논의 결과와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6개 지구 중

2개 지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요인이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것은 당초 계약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재상정해 정정 반영한 결과 호반건설이 최고득점했다.

또 중앙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광주도시공사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함에 따라 광주시의 제안접수 공고 규정에 의해 자순위 제안사인 한양이 그 지위를 승계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등을 거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광주시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2단계 사업공모에 미 접수된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중에 재공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한전공대 부지 선정 절차 본격화

광주·전남에 3곳 씩 추천 요청
최종 결과 1월말 이전 나올 듯

한전이 한전공대 부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한전이 19일부터 3주간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각 3곳씩 후보지를 추천받기로 하면서 두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전은 이날 오전 각 지자체 관련 부서 담당자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실무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전공대 부지선정 기준위원회가 마련한 부지선정 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제안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광주, 전남 지자체는 기준안에 따라 각각 3곳의 추천 부지를 각각 선정할 뒤 한전 측이 설명한 선정 양식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다. 또 오는 21일에는 한전공

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실무협의를 착수한다.

광주에서는 현재 전체 5개 자치구 중 4곳에서 후보지를 광주시에 낸 상태다. 북구는 장성군과 공동으로 3지구, 남구는 대촌동 일원, 광산구는 옛 전남축산시험장 부지, 서구는 매월동 일대 등을 각 후보지로 제안했다. 광주시는 한전 측이 제시한 기준안을 적용해 내부 심사를 거쳐 1곳을 탈락시키고, 3곳을 후보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타 시군에서 한전공대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직접 나주시와 협의해 나주시역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공대 부지선정 최종 결과는 늦어도 내년 1월 말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리뷰 2018 이 사건 - 광주법정 전두환
치매 핑계로 5월 진실 덮을 수 없다 ▶6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 오건규 화순
매화만 그리니 매화 닮아가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가, 피부 피로
잘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C 콤플렉스™의 항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가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어린이들이 미트 아르레퍼시픽 매장 아르레퍼시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morepacifical.com · 전화번호: 080-023-5454